



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 성평등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9.28.(월) 이데일리는 「26.8조 성인지예산, 성차별 해소 검증은 ‘깜깜’」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6조 8000억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지만, 예산이 성별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관계 부처 입장 >

- 정부는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‘성인지 예산제도*’를 운영하고 있으며,
 - * 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며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예산과 이를 관리하는 제도
 -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’10년 29개 부처, 195개 사업, 7조 3,144억원에서 ’27년 예산안 기준 33개 부처, 274개 사업, 26조 8,78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 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.
- 양적 확대와 함께 그간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*가 있었으며, 사업별 성과와 더불어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 사업 확대·개선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10년 49.6%에서 2025년 56.9%로 증가하는 등 성평등 전반의 개선도 주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.

* (농림부 농기계임대사업) 남성 중심의 농작업 환경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개선

(노동부 모성보호 육아지원)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중심 정책에서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등 공동 돌봄 강화로 패러다임 확대

- 성인지 예산 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‘예산 사업’의 성과지표라는 특성상 성별수혜자 규모 등 정량적 지표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정량적 지표 또한 정책의 성인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또한, 각 사업의 지표 내용 또한 특정 성별 중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려한 성별균형 지표로 다양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
- 이와 함께,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매년 ‘성인지예결산협의회’를 통해 대상 사업 선정, 성과평가 관리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·협력해 오고 있습니다.
- 올해는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을 맞아,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, 국회, 현장 및 전문가 등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 및 지방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	책임자	과 장 박혜원	(02-2100-6191)
		담당자	사무관 최도연	(02-2100-6192)
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 진민규	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 전수민	(044-214-2913)